

# 13<sup>th</sup> 자치재정 월례포럼

일시: 2008년 11월 7일 (오후 2:00 ~ 5:00)

장소: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

주최: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 [발표문]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략과 발전방향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 1.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와 경과

□ 재정이 국가발전과 민생 안정 전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기금의 1년 단위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에 걸친 재정운용 목표,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등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연동·보완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수립한 후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까지 3차례 연동 보완과정을 거침.

2007년에는 국가재정법 제정 시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 제출이 의무화 됨.

### 2.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 평가

□ 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경과

○ 2007년 12월 기획예산처에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함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작성 지침 포함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는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작업의 기초자료로 사용

/ 지출 유형별 인건비, 기본경비, 투자사업비, 보조사업비, 융자사업비 등 8개 항목

□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위한 공개토론회

○ 2008년 6월 23일 ~27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 개최

○ 토론 주제

/ (총괄)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R&D) 연구장비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방안

(산업)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전략 (교육)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 개선방향 (사회복지) 아동 보육지원 개선방안 (수송 교통) Land Bank 추진 모델 등

□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과 문제점

○ 위 운용계획은 1부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비전, 2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전략

3부 중기 재정운용 모습, 4부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5부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에서 종전의 16개 분야를 12개 분야로 축소해서 비교 평가가 어렵게 함

/ (종전) 산업·중소기업 분야 ⇒ (현행)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종전) 농림해양수산 분야 ⇒ (현행)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종전)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 SOC 분야 등

○ 감세와 근본적 세제 개편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 / 투자 촉진을 위한 저세율, R&D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 목적세 정비 등

○ SOC 분야에서 토지은행 주장,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 농림 분야 / 유기농, 환경친화 농업 부분이 없다

○ 문화체육 분야/ 전시컨베션산업 육성

○ 국방/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

○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 /보통이 대부분 60%, 미흡이 5%(2006년)

보통이 67%, 미흡이 11% (2005년)

○ 전체적으로 공약집과 유사함

3. 노무현정부 (07~11년) 국가재정운영계획과 현 정부 계획과 비교

○ 07년 운용계획은 1부 ‘국가발전의 장기 비전’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 국가발전 전략과 비전 2030 해설 등 종합 전략을 해설

○ 목차 비교

노무현 정부(2007~2011년)	이명박 정부(2008~2012)
1부 국가발전의 장기 비전 1장 경제 사회의 여건 변화 2장 국가발전 전략과 비전 2030	1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 : 선진일류국가 건설
2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전략 1.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2.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3. 녹색성장, 안심사회 지식경제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 4.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3부 재정운용의 현황과 평가 1장 주요 재정지표 추이와 현황 2장 재정운용의 평가와 과제	3부 중기 재정운용 모습

4부 2007~2011년 중기 재정운용 방향 1장 재정운용 여건 2장 재정운용 방향 및 목표	4부 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5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5부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6부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노무현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

-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개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및 정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구축, 국가재정법 제정 및 시행  
특별회계 기금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낭비 대응

이명박 정부의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 예산 절감 추진, 재정 성과관리 강화, 시장친화적 재정운용 확대, 재정운용의 자구  
노력 강화,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행정, 부담금 정비 및 관리 강화,  
국가 자산의 활용가치 제고, 국가 채무 관리 강화, 공공기관 선진화

#### 4. 국가재정운용계획 발전방향

연동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이 큼
- 우리나라는 매년 새로운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대통령 임기 첫해에 향후 5년간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변화만 수정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
- 5년 단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변화된 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들만 조정하고 신규사업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  
로 예산 간 연계성 증대

재정 기준선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도 대비 증가율을 사용함
- 불가피한 지출의 증가와 불요불급한 지출의 증가를 구분하기 어려움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자  
동적으로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증가
- 기준선은 현행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에 수입, 지출, 그리  
고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즉 기준선은 현재의 정책이 변화없이 유  
지되는 경우에 대한 전망치
- 기준선은 현행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정책에 따라 추계하는 것이므로 예산상의 변화

나 정책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사용

○ 기준선은 미래에 나타날 재정 지출 문제를 미리 알려줌, 기준선은 정책 중립적인 비교기준으로서 행정부의 예산안이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변화의 정도를 알 수 있음

□ 시민사회와 야당의 대안예산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

○ 5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산정하여 미래 비전 제시

○ 조세 제도와 중요 정책 사업 제시

#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의 문제점과 대안

'08.11. 07

이 한 규( 민주당 정책위 예결전문위원)

## 1. 2009년 (수정)예산안의 문제점

### 1) 수정예산안의 제출

- 10.2일, 정부는 총지출 273.8조원('08 대비 6.5%증가) 규모의 2009년 예산안 제출
  - 실질성장 5%(경상 7.4%), 환율 1,000원 전제로 편성
  - 국세수입 179.6조원(7.6%증), 세입국채발행 7.3조원
  
- 민주당은 적정성장률 원칙(3%대), 부자감세포기원칙, 일자리창출확대, 중소기업지원, 사회안전망 확대를 고려한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
  
- 11.3일, 정부는 총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 발표
  - \* 정부수립 이후 세 번째 수정예산안 제출( '70년, '81년)
  
  - 실질성장 3.8~4.2%(경상 6.2%~6.6%), 환율 1,100원/\$
  - 국세수입 177.6(당초 △1.9조), 세입국채발행 17.6조원(10.3조원 증가)

### 2) 부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 추진: 대규모 재정적자 초래

- 정부의 대규모 감세에 따라 26.2조원 세수입 감소
  - '09년도에만 14조원 세수입 감소
  - \* 법인세(△2.8조), 중부세(△1.5조),소득세(△1.4조), 양도세(△1.3조)등
  
- 일반회계 세입 적자국채 발행액(17.6조원) 사상 최대

< 일반회계 국채발행 추이(조원) >

'99년	'01년	'03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4	2.4	3.0	9.0	8.0	6.7	7.4	17.6

- 대규모 재정적자 초래
  - 일반회계 세입 국채발행:(당초) 7.3조원 →(수정)17.6조원

- 관리재정수지: (당초)-10.4조원 → (수정)-21.8조원(對GDP -2.1%)
- 국가채무:(당초)333.8조원 → (수정)350.8조원(對GDP 34.3%)

### 3) SOC 위주의 경제활성화 예산

- 2009년 (수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10.4% 보다,
  - (상위): SOC(26.7%), 산업·에너지(21.1%), R&D(10.8%)
  - (하위): 통일외교(3.7%), 문화·관광(3.7%), 공공·안전(5.1%)
- 한국은 건설투자비중이 높고, 철도 등 일부항목을 제외한 SOC 축적도(KDI, 2006)는 120% 과잉된 상태
  - \*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05년기준): 한국19.9%, OECD평균 9.1%

### 4) 사실상 복지예산 축소 예산

- '09년 보건·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지만, 법집행을 위한 자연 증가분(법정지출경비)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감소
  - 보건복지부 재량지출 1.4% 감소
- 빈곤계층이나 일반 취약계층의 사업예산이 정체 또는 축소
  - \* 기초생활보장 △3,265억원(-4.5%), 장애인수당(△11.7%)등
-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 미흡
  - 8개부처 44개사업으로 수행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예산은 '08년 10,458억원 → '09년 10,950억원으로 492억원(4.7%)증가에 그침

## 5) 열악한 지방재정 압박 예산

###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09년 지방재원 감소분은 3.3조원 이상, 수조원에 달할 전망

- 종부세 감소분: 1.5조원
- 소득세·법인세 인하에 따른 주민세 감소분 1.8조원,
- 교통환경에너지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감소
- 성장하락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소 등

□ 정부는 「수정예산안」에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1.1조원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규모

## 2. 대안: 일자리, 중소기업, 교육, 복지 예산 확충

### 1) 세입 조정

#### □ 정부·한나라당 감세안 철회로 충분한 세입여력 확보

- 특히, 3大 부자감세안(종부세, 법인세, 상속세)은 반드시 철회

□ 법적인거 미비, 집행실적 부진, 사업타당성 결여 사업예산 삭감을 통해 **교육·복지 확대 지출 재원 확보**

□ 일반회계 세입 (적자)국채발행 규모 최소화

### 2) 3大 부자 감세법안(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철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결집이 중요

- 정책실패와 신뢰상실로 경제위기를 자초한 현정부는, 오히려 위기극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론만 분열시키는 대규모 부자감세법안을 추진

□ 종부세(△1.5조원), 법인세(△2.8조원), 상속세(△0.6조원) 감세안을 철회, 이 경우 4.9조원 세수 증가효과 발생



### 3) 지방재정 보전 대책 강구

- 지방교부세 교부율(19.24%) 상향조정
-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안 강구
  - 개별소비세 지방 재원화
  - 「복지재정교부금법」 제정

### 4) 기업은행 민영화 2010년 이후로 연기

- '09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 1.2조원 계상
- 금융위기, 내수침체로 중소기업 경영난 최악의 상황에 직면
  -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우려 증가
  - KIKO 피해기업, 지방 우량중소건설업체,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지원 절실
- 경제위기극복 과정에서 필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필요

### 5) 남북평화협력 예산 전년 수준 유지

- 남북경협비용(기금) 전년대비 50% 삭감(6,101억원→3,006억원)
  - 주로, '10·4선언' 이행과 '개성공단활성화사업' 관련 예산삭감에 기인
-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로 평가받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 예산의 삭감은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상반
- 10.4선언예산 삭감 역시, 말로는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행의지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최근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남북관계 환경 개선 분위기 조성,  
최소한 남북평화협력 예산은 전년 수준 유지 필요

## [별첨] 교육 예산의 몇 가지 문제

### 1. 2009 교육 예산안의 문제점

- '09년 교육관련 예산은 '08년(13.8%) 보다 낮은 증가율(9.5%)
  - 예산과 기금을 합하여 45조5,897억원임
  - 고등교육예산은 4조2,933억원으로 '08대비 543억원 증가(1.3%)에 그치고, 평생·직업교육예산은 389억원이 줄어 7.4% 감소
  
- \* '07년도 교육예산은 GDP대비 4.3%로 OECD 평균('04년) 5.7%에 비해 현저히 낮음.
- \* 교원1인당 학생수: (한국) 초등 31.4명, 중등 18.4명  
(OECD평균) 초등 16.6명, 중등 13.6명
  
- 감세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77억원 감소 전망, '10년 교육세 본세 통합시 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질 전망.
  - \*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9%p 인상해도 2.7조원 감소(송기창,2008)
  - \* '10년 '교통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6천억원 증가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세 폐지로 6천억원 감소 예상(김홍렬, 2008)
  
- 영어몰입교육,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사교육 광풍을 초래 할 초·중등교육 사업에 집중 투자
  - 고교다양화 300에'09년 3,650억원 지원(지방교부금 사업)
  - 국고에서 영어교육 지원 대폭 증액되고('08. 73→ '09. 195억원) 지방교육청에서도 영어교육 예산 증가 전망
  -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사업 축소·부실 우려
  
- 장애아·여성정책에 대한 지원 삭감
  - '장애아교육지원' 예산 4억원 감소( 40→36억원)  
장애학생 통합교육기반 구축사업도 6억원 감소
  -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능력증진사업' 예산 삭감  
('08년 1,215억원 →'09년 370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액 일부 미확보로 혼란 예상
  - 환급금 신청 대상자는 25만여명에 4,611억원 소요 예정
  - '08년 추경예산으로 1,53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09년 예산에 1,922억원만 편성되어 나머지 1,152억원이 부족

## 2. 대안

- 교육세 폐지 반대
  
- 대학생 등록금 대폭 지원
  - 등록금 후불제 도입 검토
  
- 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실업계, 군단위 지역

## 2009년 환경분야 예산에 대한 의견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무리한 경기부양
  - 당초 5% 성장, 수정예산에서는 4% 성장 예상
  - 특히 수정예산의 상당부분은 SOC투자로 지속불가능성을 높이는 문제
  - 건설회사 지원과 SOC 확충 등의 경기 활성화 대책은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
  - 세수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실 가속화
- 부유층 감세와 서민대책 부실
  -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 감세를 포기하고, 서민부담을 완화해주는 재정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환경예산의 절대적 취약
  - 경제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관행이 여전하고,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건설예산이 증가한 반면 실질적인 환경예산은 점점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
- 한반도대운하 사업 성격의 예산이 곳곳에 숨어 있음
  - 환경부와 국토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격이 짙음
  - 국토해양부가 하천의 오니를 제거하는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친수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신청
  - 환경부의 강변여과수개발사업 예산이 거의 2배로 증액된 것은 한반도대운하 사업 추진시 논점이 된 상수도 취수대책을 추진하는 성격임
  - 최근 한나라당의 운하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이 큼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하천 선진화 정책제안' 중에서

#### 1. 하천 선진화 정책제안 주요내용

#####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 농업용 저수지 정비, 댐 增高 등을 통하여 하천유지용수 등 확보
- 상수 확보의 광역화, 취수원의 다변화 등 용수배분의 효율화

##### 안전한 하천관리

- 친환경 하천정비와 홍수예방용 저류지 조성 등으로 유역단위 담수능력 및 홍수 조절능력 제고
- 기후변화성 이상호우 및 가뭄의 대처능력 향상

**□ 건강한 물 환경 조성**

- 수변·하구·연안 생태계 복원
- 환경기초시설 투자 증대와 그 관리 효율화

**□ 수자원의 사회인식 제고**

- 수자원이용의 지역편차 지양
- 고도정수, 심층수 등 기술선진화

**2. 예시제안 : 영산강 하천선진화방안**

- 농업용저수지(나주, 담양, 장성, 광주) 리모델링** 등을 통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 오염원 차단 및 저감**

- 하천둔치 경작행위 규제,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변식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 하천생태 보전 및 홍수예방**

- 친환경 하천정비와 홍수예방용 천변 저류지 조성

**□ 친수문화공간 확대**

- 제방 활용 강길 조성, 첨단농업과 연계한 여가문화현장 유도

**□ 영산호 수질 개선**

- 저층수 배제시설, 오염물질 준설, 해수유통방안 등 검토

**○ 균특회계로 구성된 환경예산은 실집행률이 떨어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에서 매칭해야 가능한 균특회계에 대해서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특히 그리 규모가 크지않은 환경부문 균특회계에 대해서는 미신청이 많아 남아도는 실정

**○ 서민생활안정 및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의 문제점**

- 일자리 창출 예산이 141억원에서 217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긍정적임
-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일거리 제공’ 수준의 일회성 사업 예산이고, 지출방식 역시 지자체에 분배해서 집행하다보니 실제 수요층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대기보전 예산을 12.7%나 감액한 것은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임**

- 저공해차보급, 운행차 저공해 사업,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자동차연료 환경성 평가 등 환경부의 핵심 대기정책 예산이 대폭 감소
  - 특히 미세먼지 등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지출이 확대될 전망
- 기업환경규제 성격의 예산은 감소,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증가
- 자동차연료 환경성 평가, 수도권대기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업환경규제 성격의 예산은 감소하고, 기업환경경영지원,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예산은 대폭 증액
  - 환경예산에서도 친기업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오히려 기업의 환경관리능력이 제고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
- 지하역사공기질개선대책 예산이 신규로 149억을 배정한 것은 의문
- 신규예산을 일시에 대폭 배정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음
  - 특히, 지하역사의 공기질 관리는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역도시에만 해당하는 예산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기질 도심지역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온당함
- 한반도권역환경보전협력사업 예산 대부분 감액
- 이념적 잣대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

## 2009 국방예산

### 1. 2009년 국방예산 현황

#### 1.1 2009년 국방예산(안)은 28.6조원

○ 2008년 보다 7.5% 증가

- 이 중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는 5.7% 증가한 20조 425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8조 5,954억원임.
- 28.6조원은 정부 총지출규모의 10.2% 수준.

(억원)

구 분	'08 예산	'09 예산안	증 감	%
국 방 예 산	26조 6,490	28조 6,379	1조 9,889	7.5
◦경상운영비	18조 9,677	20조 425	1조 748	5.7
▪인건비성 경비	10조 2,146	10조 4,724	2,128	2.1
▪사업비	8조 7,531	9조 6,151	8,620	9.9
◦방위력개선비	7조 6,813	8조 5,954	9,141	11.9

\* 국방예산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일반회계

\* 인건비성 경비 : 급여, 수당 및 군인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 2008~ 2012 국가재정운용계획(2008.10)상 국방비 5년간 연평균 6.9% 증가계획.

- 2007~ 2011 국가재정운용계획(2007.10)의 국방비 계획은 5년간 연평균 9.0%

〈표 4-10〉 국방 분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국방 분야	259,118	278,254	299,508	321,222	342,528	(7.2)
(일반회계 기준)	(266,491)	(286,379)	(306,392)	(326,936)	(348,032)	(6.9)
• 병력운영	99,220	101,436	107,860	114,713	122,025	(5.3)
• 전력유지	81,039	88,858	94,658	99,334	102,525	(6.1)
• 방위력 개선	76,768	85,899	94,553	104,315	114,680	(10.6)
• 병무행정	2,091	2,061	2,437	2,860	3,298	(12.1)

\* 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 1.2 국방비 국제비교

○ 한국의 국방비는 규모면에서는 세계 11위(2003년 기준).

- 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56위,
- 국민 1인당 국방비는 31위
- 병력 1인당 국방비는 세계 62위임

\* 최신자료에 의하면 국방비 규모 세계 10위(2008년, 제인스인더스트리)

○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참여정부 기간에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해 GDP 대비 2.6%, 재정 대비 15%대, 정부총지출 대비 10%대 유지
- 특히, 국방개혁 2020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008년 국방비 연 8.8% 증가

### ※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2003년 기준)

구 분	이스라엘	러시아	중 국	미 국	일 본	한 국
■GDP 대비 국방비비율(%)	9.5 (6위)	4.9 (22위)	3.9 (36위)	3.7 (39위)	1.0 (134위)	2.4 (55위)
■국민 1인당 국방비(\$)	1,544 (3위)	455 (21위)	43 (88위)	1,391 (4위)	337 (27위)	307 (31위)
■병력 1인당 국방비(\$)	61,826 (27위)	67,874 (24위)	24,866 (53위)	283,756 (1위)	178,554 (8위)	21,296 (62위)

\* 자료출처 : The Military Balance '04 · '05

### 총지출 대비 국방분야 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국가	미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OECD평균	한국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20.1	6.1	5.5	5.8	2.5	4.8	10.4



### 1.3 2009년 국방예산의 특징 (국방부 보도자료)

- 경상운영비의 경우, 병영생활관·군 관사·독신자숙소 등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앞당겨 조기에 개선하고
  - 특히, 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신축 및 보수 등 시설안전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 장비유지·수리부속지원 등 현존전력 지원을 내실화하는데 중점.
  - 또한, 6·25전사자 유해발굴 활성화, 귀환 국군포로·가족지원 등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음.
- 한편, 미래형 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 등 핵심전력을 중점 확보하고,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R&D 투자를 확대(국방비의 5.4→5.7%) 하였음.

## 2. 2009년 국방예산의 문제점

### 2.1 경상운영비의 과다

- 국방비 28.6조원 중 경상운영비는 70%인 20조원으로 과다함.
  - 인건비가 10조5천억원이며, 급식/피복비를 합할 경우 국방비의 40% 초과.
- 인력계획을 위한 과학적인 모형이나 정보체계가 미흡
  - 중장기적인 인력계획보다는 단기 위주의 인력계획에 치중.
  - 군사전략→전장운용개념→전투능력평가→임무요구와 같이 Top-down의 인력소요판단 미흡.
  - 육해공군 각군의 전력증강과 부대수에 맞추어 병력수 산정하는 방식

### 2.2 방위력 개선비의 비효율적 배분

- 2009년 예산안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
  -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 신속한 지휘통신체계 구축 지원
  - 핵심기술 및 민간 과급효과가 높은 분야 위주로 국방 R&D 투자 확대 (對국방비 비중 5.4%→5.7%)

- 방위력 개선비 8조6천억원의 분야별 내역과 예산안의 정책방향과 불일치.
  - 예산안은 첨단,네트워크,지휘통신체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감시,정찰,C4I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7천여억원에 불과함(전체 방위력개선비의 8%대)
  - 기동·화력·탄약 분야 2조원, 합정 1조2천여억원, 항공기 1조5천억원
- 방위력 개선비의 배정이 각군의 개별 플랫폼 위주로 이루어 짐.
  - 각 군별 전차,전투기,전투함 등에 배정
  - 미래전에 반드시 필요한 C4I와 같은 필수전력 투자는 소폭.
  - 무기체계의 소요기획을 실질적으로 각군별로 행사.

### 2.3 국방개혁 2020과 2009년 국방예산

- 국방개혁2020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을 상향시킴
  - 애초 국방부는 11% 증가를 주장했으나, 이후 9%대로 낮춰서 추진(2006,2007 국가재정운용계획)했고, 실제 2007년,2008년 국방비 증가율은 8.8%였음.
  - 그런데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6.9%(지출기준 7.2%)
- 첨단 정예군의 의미는 "미래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군사력"이라 할 수 있음.
  - 국방개혁2020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병력수(50만), 예산(621조원 등)임.
  - 한국군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국방변혁(transformation)을 달성하는 것
  - 국방변혁은 기술,작전,조직을 동시,복합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
  - 국방변혁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전투발전이나 군 현대화와는 다른 개념
- 국방예산의 결정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임.
  - '예산편성이 국방운영의 효율화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
  - '정예화된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 구성되었는지,
  - '국방개혁2020의 방향성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3. 대안

### 3.1 합동성에 기반한 소요제기

- 경상운영비 과다, 방위력개선비 비효율적 배분, 국방개혁 2020과의 차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은 '소요기획'을 합리화하는 것임.

- 위협을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었던 냉전시기에 개발된 소요기획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대규모 지상군 위주, 재래식 전쟁을 대비하는 군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
  - 그러나 단지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임무는 무엇인가', '군사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개념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답을 하는 과정, 즉 소요기획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대 전환이 필요함.
- 소요기획의 일대전환은 바로 '육해공군의 합동성'에 토대를 둔 소요에서 시작.
- 각 군별 개별체계(단일 플랫폼) 위주의 소요기획으로는 통합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어려움.
  - 국가안보전략→군사전략→합동작전→합동서에 토대를 둔 소요창출, 즉 하향식(top-down)단계에 따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군사력 건설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각군의 인사권과 독립된 합동특기장교제도를 도입하고, 각군의 예산권과 독립된 국방부나 합참 차원의 통합예산집행이 바람직함.

### 3.2 군부대 등급화

- 군부대의 임무와 임무를 수행할 준비정도에 따라 무기체계를 부대별로 차별화하여 배치해야 전력투자예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 각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이 개량된 무기체계를 모두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
  - 상향식의 소요제기 방식으로 전력투자예산의 대부분을 사용되어,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정보자산들과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를 충족시킬 예산의 폭이 작았음.
- 작전부대의 준비태세의 수준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측정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상위단계 "완전한 준비태세"부터 가장 하위단계 "전투수행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까지 등급화.
  - 등급화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부대운영은 무기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시간과 예산이 크게 소요되어 작전부대의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2008 예산안 국방분야 정리

##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안 (예산+기금)

(조원, %)

구 분	'08*	'09안	증가율
1. R&D	11.1	12.3	10.8
2.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2.6	13.2	5.0
3. SOC	19.6	21.1	7.9
4. 농림수산식품	16.0	16.6	4.1
5. 보건·복지	67.7	73.7	9.0
6. 교 육	35.6	38.7	8.8
7. 문화·체육·관광	3.3	3.4	3.4
8. 환 경	4.5	4.7	5.6
<b>9. 국 방(일반회계)</b>	<b>26.6</b>	<b>28.6</b>	<b>7.5</b>
10. 통일·외교	2.8	2.9	2.2
11. 공공질서·안전	11.7	12.2	4.4
12. 일반공공행정	45.9	47.5	3.5
◆ 예산(순계)	195.1	209.2	7.2
◆ 총지출	257.2	273.8	6.5

\* 본 예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679억원)

- 평택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정소요 반영 (871 → 775억원)

\* 용산기지 등의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

-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비 소요 지원 (1,544 → 1,684억원)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264억원)

- 군부대, 탄약고, 훈련장 등 군용시설의 이전 및 건설소요 지원 (3,275 → 2,264억원)

## ⑨ 국 방

-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
  -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및 신속한 지휘통신체계 구축 지원
  - 핵심기술 및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위주로 국방 R&D 투자 확대 (對국방비 비중 5.4%→5.7%)
-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복지 개선 중점 지원
  - 병영생활관, 독신숙소 등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의 조기완료 ('13→'12년) 추진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안전 투자 확대 및 군기능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강화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전사자 유해발굴 활동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억원)

구 분	'08	'09안	비 고
▪ 병력운영	99,220	101,436	·유급지원병 확대(64→204억원)
▪ 전력유지	81,039	88,858	·군 주거시설 개선(5,047→7,276억원) ·시설안전대책(548억원)
▪ 방위력개선	76,768	85,899	·공중조기경보통제기(1,876→2,858억원) ·국방R&D(14,522→16,209억원)
▪ 병무행정	2,091	2,061	·사회복무자 인건비(376→392) 등
<b>국방 분야計 (일반회계 기준)</b>	<b>259,118 (266,491)</b>	<b>278,254 (286,379)</b>	<b>7.4% 증 (7.5% 증)</b>
(예 산)	255,174	273,865	7.3% 증
(기 금)	3,944	4,389	11.3% 증

## 2009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

### - 정부 지침과 인천시(부평구)를 중심으로 -

2008.11.7(금) 14:00 자치재정월례포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정책위원장 박준복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편성하는 지방예산의 방향(속내)을 들여다보기 위해 행안부의 예산편성메뉴얼(지침)과 광역시와 자치구의 2009년도 기본지침을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운용의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편성(예산)내용은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보완단계에 있는 시기여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었다.

특히, 행안부 메뉴얼에 의해 지방정부의 지침이 9월중 수립되었기 때문에, 10월 들어 국내,외 경제 악화에 따른 대응(대책) 방향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가 의회에 보고하거나 관련부서장(공무원)의 구술(의견)을 종합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일부나마 가름해 보았다.

#### □ 정부 지침

##### 1. 2009년도 지방재정 운영 여건 전망

- 세 입 : 정부는 2005~2008년 기간동안 지방예산의 총 수입이 7~11%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9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방세는 세목체계의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세수변동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구조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국세 수입의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 증가율도 둔화를 예상했다.

[최근 5년간 국세 및 지방세 신장추이]

(단위:%)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국 세	3.1	13.2	13.1	6.4	12.4
지 방 세	9.0	4.9	8.8	6.9	11.7
지방교부세	-3.2	35.8	6.5	17.2	12.7

\* 2008년도는 당초예산 기준임.

- 세 출 : 정부는 민선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 성장동력 발굴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복지비는 지방예산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확대 등 예산증가 전망]

(단위:조.%)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당초)	증가율 (‘04~07)
총예산 A	98.9조	107.1조	115.5조	128.0조	124.9조	29.6%
사회복지 예산 B	10.7조	12.9조	15.3조	18.8조	21.7조	76.3%
비율(A/B)	10.8%	12.0%	13.3%	14.7%	17.3%	

또한 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된 소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 정부의 2009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

정부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서, 지방예산 10% 절감 및 재투자를 제시했는데, 그 취지는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재정지출 총액 자체를 단순히 축소하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절감된 재원을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 대책 등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5대 원칙을 제시했다.**

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 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② 통상적. 점증적 방법에 의한 기존의 예산절감이 아니라, 구조적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으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형태·제도적 변화와 원가·비용 마인드 정착을 도모할 것.

③ 중앙이나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지시·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지속적 의사소통과 협력 하에 추진 할 것

④ 단순히 예산절감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두어 사업을 연기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추진·평가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둘 것.

⑤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이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절감재원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 등이다.

**10대 중점 착안사항도 제시했다.**

① 중앙-자치단체간, 시·도와 시·군간, 자치단체 내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

비. ②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른 예산낭비 ③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예산낭비 ④특성이 없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⑤실제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 ⑥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사, 문화시설의 경쟁적 건립에 따른 낭비 ⑦회관·체육관·운동시설 등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⑧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⑨전년 대비 예산증액 방식의 예산편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따른 낭비. ⑩특별회계, 기금의 난립, 과다조성,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미흡에 따른 낭비 등이다.

## □ 인천광역시

### 1. 2009년도 재정운영 여건 전망

- 세 입 : 지방세는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08년도 보다 4~5%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특별한 증가 사유가 없다고 전망했다. 반면,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의 수입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세 출: 인천시는 대규모 특수 재정수요의 증가와 시민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2호선 건설,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과 2009세계도시축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확대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 2. 2009년도 재정운용 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 2009 인천방문의 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의 차질 없는 추진에 집중지원 한다.

-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낭비성, 선심성·행사성 경비를 억제한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투융자심의 사전절차를 확행한다. 신규사업 최대한 발주 지연 및 억제한다.

-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한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는 필요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전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 하는 등 세출구조를 조정한다. 조직개편과 통,폐합 부서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유사중복 사업을 철저히 점검, 통폐합 추진 한다.

## □ 부평구

### 1. 재정 여건과 전망

- 세 입 : 정부의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 예년 증가율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 세입의 주가 되는 지방세는 '08년도 보다 3%내외의 증가를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특별한 증가 사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예상
5.4%	7.6%	7%	3%

- 세 출 : 법정 경직성 경비(인건비 인상 등) 및 서민생활안정 등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투자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 2. 재정운용 방향

-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로 낭비성·선심성·행사성 경비 억제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 징수(세원 발굴과 체납액 적극징수)를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하고,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정공시 및 공시위원회 내실운영, 예산편성결과 알리 쉽게 인터넷공시,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견수렴과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운영 및 투융자 심사를 확행 하되 재심사 대상사업은 반드시 재심사하고, 국, 시비 보조사업은 신청 전에 투자 심사를 확행 한다.

## 3. 2009 투자재원 배분 방향

- 생태환경 조성 :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 재개발
-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 동 주민복지센터 기능강화, 자원봉사 전문성 향상, 자활자립 지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강화, 노인일거리 마련 및 소득 창출(노노 홈케어, 환경지킴이, 공동작업장), 여성 취업 및 창업 활성화(취업정보센터 보강),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 벤처 등 고도화된 첨단산업 기반 구축 : 첨단 아파트형 공장 유치, 재래시장의 현대화, 향토기업 GM대우 지원(대우차 타기운동), 청년실업극복센터 설립운영
- 품격 높은 문화 예술도시 창출 : 문화사랑방 확대, 부평품물대축제 국제화와 문화관광 상품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시설관리운영(문화원, 예술회관, 역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기적의도서관), 부평역 일원 테마파크조성,
- 꿈을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 실현 :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학습공동체 구성,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급식경비 지원, 아동급식 시행), 원어민 교사 및 영어전용구역 지원,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운영,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연계 협력(책 읽는 문화 봄 조성)
- 건강 100세 실현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무료검진 사업 및 의료비 지원(암 검진, 만성퇴행성 질환 검사, 암 치료비, 희귀난치성 치료비 지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치매 정신보건 사업 활성화(자가 치매환자 가정 간호 및 지매용품 제공,

치매 주간보호센터 2개소 운영)

### □ 2009 정부 복지예산 축소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 지출(예산+기금)은 총 73조 7천억 원으로 올해 6조 588억원보다 9%가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을 상세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농어촌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절감 10% 방침에 따라 엉터리로 예산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복지예산 6조원 증액 중 이명박 정부 의지로 늘린 예산은 고작 6천억

우선 2009년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8.9%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0.2% 증가에 비해 둔화됐다. 또,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3조 3,252억), ▲ 2007년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장기요양보험(1조 666억), ▲ 복지 분야에 구분하기 어려운 용자 사업(9,236억원) 등이 차지했다.

### 복지예산 줄줄이 삭감

정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고 하겠다 하면서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4.4% 인상했다고 하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오히려 3,265억 원이 줄었다. 4.5%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줄어드는 등 장애인 복지예산도 1.6% 감소했다.

이처럼 지원대상이 준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서 14만 3,057명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예산 절감 10%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 맞춰 예산을 짠 게 아니라, 할당된 예산에 맞춰 취약계층 지원인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 [대상자 증가 추이보다 과소 편성된 사업]

사 업	2008년 지원대상수	2009년 지원대상수	감소 인원	감소율
최저생활급여-생계급여	159만9천6백명	157만6천명	2만3천6백명 감소	-1.5
최저생활급여-주거급여	151만3천명	149만명	2만3천명 감소	-1.5
장애수당	563,526명	491,484명	7만2천42명 감소	-12.8
장애아동수당	18,033명	17,590명	443명 감소	-2.5
장애인자녀학비지원	1,459명	1,314명	145명 감소	-9.9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12,882명	11,077명	1,805명 감소	-14.0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14,893명	11,186명	3,707명 감소	-24.9
의사상자예우	50명	40명	10명 감소	-20.0

산모신생아도우미	62천명	49,561명	1만2천여명 감소	-20.1
노인돌보미바우처	14,396명	10,140명	4,256명 감소	-29.6
독거노인도우미	6,600명	4,990명	1,610명 감소	-24.4
<b>합계</b>	<b>3806439</b>	<b>3663382</b>	<b>143057명 감소</b>	<b>-3.8</b>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2008년 추경포함

\*진보신당 '08.10자료 인용

[지난 5년(2003~2008) 대비 200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 증감율]

(단위: 억원, %)

구 분	2003~2008년 증감							2009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연평균 증감율 (증가분)	2008년 대비 증가율
기초생활보장	35,402	39,283	46,261	53,438	65,831	68,512	14.3 (29,229)	1.27
보육가족여성	3,606	4,625	7,094	9,426	12,173	15,678	34.5 (11,053)	17.01
노 동	62,692	65,262	82,122	93,186	104,294	105,457	11.3 (40,195)	5.24
보 훈	22,258	23,721	25,116	26,985	29,710	31,288	7.1 (7,567)	7.23
공적연금	123,323	137,991	160,796	172,025	189,955	214,285	11.7 (76,294)	11.28
주 택	113,443	109,899	134,994	135,459	139,664	145,255	5.4 (35,356)	3.79
취약계층 지원	10,508	12,940	11,940	7,175	9,108	9,232	13.2 (3,708)	30.51
노 인· 청소년				5,729	7,495	22,220	45.5 (22,220)	
사회복지 일 반				1,730	2,726	3,312	15.8 (3,312)	
보건분야	46,404	48,128	51,481	55,108	52,891	60,166	5.5 (12,038)	14.83
<b>&lt;총 액&gt;</b>	<b>417,636</b>	<b>441,849</b>	<b>519,804</b>	<b>560,261</b>	<b>613,848</b>	<b>675,403</b>	<b>10.2 (233,554)</b>	<b>8.96</b>
예산합계	137,070	149,282	158,092	145,027	168,144	203,333	8.7 (54,051)	12.25
기금합계	280,566	292,567	361,712	415,234	445,704	472,070	11.2 (179,503)	7.56

\* 진보신당 08.10 자료인용

내년 하반기 복지대란 우려

-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원근거는 그대로 두고, 지원대상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내년 복지

예산이 편성되었다. 특히 법정급여의 경우, 예산을 추계보다 과소 편성하면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다른 사업으로부터 전용하는 등의 상황 초래할 수밖에 없고, 지원자가 줄어들어 있는데, 지원 대상이 총 14만명 축소돼서 예산이 추계되었다.

- 신청자가 줄어들어 없는 상황에서, 예산상 추계를 축소해 놓고 지원 예산을 과소 편성한다면, 내년 하반기 복지예산이 동이 날 것은 뻔한 상황이 예상된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이 실현된다면, 내년 하반기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복지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복지대란은 불보 듯 뻔하며, 결국 감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저소득,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지방정부가 될 것이다.

### 「예산 삭감 사업」

(단위: 백만원)

번호	사업명	'08예산 (A)	'09예산 안 (B)	증 감		삭감 근거 및 내역
				(B-A)	%	
1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3,887	3,412	△475	△12.2	- 지원물량을 23만포에서 20만포로 감소 - 2009년 부처 예산 요구안에서는 2008년 예산과 동일하게 요구. - 12월~2월 동안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해 양곡 50% 할인 판매.
2	저소득층난방비 지원	31,603	-	△31,603	순감	- 한시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종료. - 수급자 84만가구, 월 2만 4천원 지원.
3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139,212 *추경*	90,291	△48,921	△35.1	- 2008년 추경에서 1,392억원 편성. 2009년 예산안에서 35.1% 삭감. - 기초수급자 등 94만 가구, 지역노인 복지시설 5만6천개소 지원→기초수급자 88만 가구, 차상위장애인 8만 지원(가구당 월 2만원)
4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790,134 *추경*	3,327,784	△462,350	△12.2	○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감소(1,915천명→1,695천명). - 기본수급자 감소(1,702천명→1,695천명) - 차상위 지원방식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213천명→0명) -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원 동결.

번호	사업명	'08예산 (A)	'09예산 안 (B)	증 감		삭감 근거 및 내역
				(B-A)	%	
						○ 2008년 9월 2,747억원의 추경까지 한 사업임.
5	자활사업관리	126	121	△5	△0.4	-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성 기본사업비로 2009년 부처예산요구안에서는 126백만원 요구함.
6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505	1,472	△33	△2.2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시 금리부담과 신용능력부족을 감안해, 이차보전을 통해 금리부담을 낮추고 보증보험료를 활용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손실보전금 보조율 10%→8%로 낮춤
7	자활소득공제	22,300	20,610	△1,690	△7.6	-자활공동체 참여자 중, 근로유지형 참여자를 소득공제에서 제외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8. 10. 채수정

[지원대상 축소 사업]

사업명	'08예산 (A)	'09예산 안 (B)	증 감		비 고
			(B-A)	%	
생계급여	2,256,383	2,390,101	133,718	5.9	- 최저생계비 4.4% 증가했으나, 지원대상 감소(1,596천명→1,576천명) - 지원수준: 1인당 월 16만1천원→17만5천원
주거급여	586,883	639,180	52,297	8.9	- 지원대상 감소(1,513→1,490천명)
긴급복지	37,754	38,543	789	2.1	○ 지원대상 감소(2008년→2009년) - 생계지원 4,536가구→3.8천가구 - 의료지원 27,369가구→25.5천가구 - 주거및시설지원 480가구→3백가구 - 해산장제비지원: 408가구→해산·장제·전기요금 지원 0.5천가구 - 난방비지원: 318가구→5백가구  ○ 2009년 부처예산요구안 - 생계지원 4,740건 - 주거지원 281건 - 시설이용지원: 25건 - 해산·장제·전기요금: 3,210건

사업명	'08예산 (A)	'09예산 안 (B)	증 감		비 고
			(B-A)	%	
					-연료비: 2,250건 -중위소득 100% 이하 대부지원: 20억 -의료지원부분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를 고려하여 2008년 6월 당시 예산 편성에서 제외됨.

\*자료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요구 세부사업 설명자료」. 2008. 07. 재수정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8. 10. 재수정

#### □ 2009년도 국고보조 내시 (인천시)

인천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말을 빌리면 올해보다 지방세의 근간인 취, 등록세가 2,000억~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와 종합부동산 교부세 완화에 대비한 시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예산에 있어서도 지난주 시 정부 관계자에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올해 인천시의 사회복지 국비 보조예산은 5,405억 원이나, 내년도 내시된 예산액은 15.3% 증가한 6,220억원이라는 것이다. 담당부서장 역시 정부 예산안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냐고 오히려 반문할 정도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복지예산이 분야별로 크게 줄었는데 반해, 국비 내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복지보건가족부의 협치 부재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 확정 전 복지부가 내년도 복지예산 내시를 했을 수 있겠으나. 문제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내년 초 복지예산이 내시액 보다 크게 감액 될 경우 지방과 저소득 계층에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를 안고 있다. 정부는 국회상정 예산안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 □ 2009년 업무보고에 나타난 자치구 사업예산

인천지역 모 자치구의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정부의 예산편성메뉴얼(권고사항)과 동떨어진 사업계획들이 나열되어 있다. 즉, 10% 예산 절감은 경상비를 줄이고, 축제행사·낭비·소모성 예산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에 80일간 운영할 전시관(타구 소재) 설치 운영비로

3억원의 구비를 편성하는가 하면, BSC 및 PM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1억여 원, USB 등 이동형 저장매체 제한(내부자 정보유출 통제 장치)을 위한 “통합보완관계시스템” 2억3천만 원, 보다 강화된 웹 접근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포털사이트 소프트웨어 개발비 1억여 원, 공무원의 상시학습과 자기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5억1천만 원.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관장과 의회의장의 의전차량을 각1대(배기량 3.5)씩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 단위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재단과 도서관, 박물관에 1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고, 840억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말 준공예정이고 매년 20억원의 건축비(20년동안)와 8억(사실상은 20억 소요)원의 운영비를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현안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절감 10대 착안사항과는 배치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정부분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앞에서 전제한 신규사업들이나, 문화 행사성 사업들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정부의 감세 정책 및 자치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동산교부세의 완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 □ 맺는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교부세의 대폭 완화,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 등이 종합적으로 겹쳐질 경우 지방재정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국세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소득·소비세 제도 시행이 이제 검토되는 단계에 있고, 대다수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변화와 더불어 세출 10%줄이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제 불황이 계속될 경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지방정부의 파산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일 긴박한 국내외 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11조원 늘린다는 것이다.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고, 실업급여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도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지켜 볼 일이다.